

인권정보자료실
Ia2.51.9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B규약) 에 따른

2차민간단체보고서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모음

1996. 12.

인권정보자료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B규약) 에 따른
2차민간단체보고서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모음
1996. 12.

Ia2.51.9

1996	12	12
1996	12	12
1996	12	1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B규약) 에 따른

2차민간단체보고서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모음

1996. 1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B규약) 에 따른
2차민간단체보고서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모음

차 례

제 목	분 량
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법무부)	31쪽
0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천정배)	10쪽
0 Summary Record of the 1150th Meeting(UN)	
- 한국정부보고서 최초보고서심의회의록 및 권고	54쪽
0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	9쪽
0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UN)	7쪽
0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UN)	16쪽
- 표현의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	
0 Communication NO.518/1992(UN) - 손종규 제삼자개입금지권	8쪽
0 Protecting Human Rights: International Procedure and How to use them(AI)	18쪽
0 B규약 이행보장구조(법무부)	12쪽
0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UN)	47쪽
- 보고서 제출에 관한 매뉴얼	
0 General Comments(UN)	25쪽
0 Human Rights Committee 52, 53, 54, 55th Session(ISHR)	13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1996년 12월

A.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A.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 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civil and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PART I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 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ART II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Where not already provided for by existing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dopt such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 (a)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 (b) 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 (c)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1.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2.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 (paragraphs 1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3.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제 6 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Article 5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PART III

Article 6

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2. In countries which have no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e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3. When deprivation of life constitutes the crime of genocide,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any obligation assu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may be granted in all cases.

5.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imposed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and shall not be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invoked to delay or to preven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8

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slavery and the slave-trade in all their forms shall be prohibited.

2. No one shall be held in servitude.

3. (a)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b) Paragraph 3 (a)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countri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u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u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

(c)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제 9 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 11 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i)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 (ii)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
- (iii) 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 (iv)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s.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2.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3.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4.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Anyone who has been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10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2. (a)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b)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Article 11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Article 12

1.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2.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룸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 할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4.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14

1.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e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f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2.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3.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in full equality:

- (a)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
-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his own choosing;
- (c) 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
- (d) To be tried in his presence, and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he does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hi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him in any such case if he does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for it;
- (e) 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
- (f)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 (g)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to confess guilt.

4.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5.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6. When a person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him.

7.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Article 15

1.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the lighter penalty, the offender shall benefit thereby.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Article 16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7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ur and reputation.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8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rticle 19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 조

-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중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21 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20

- 1. Any propaganda for war shall be prohibited by law.
- 2.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

Article 21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22

-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저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 23 조

-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24 조

-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restrictions o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of the police in their exercise of this right.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to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to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23

- 1.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 2.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 3.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Article 24

- 1.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 2.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3.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제 25 조

Article 25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에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a)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 (b)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 (c)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제 26 조

Article 26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제 27 조

Article 27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의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제 4 부

PART IV

제 28 조

Article 28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present Covenant as the Committee). It shall consist of eighteen members and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o shall be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3. 이사회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제 29 조

Article 29

1. 이사회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8 and nominated for the purpos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nominate not more than two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nationals of the nominating State.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3. A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nomination.

제 30 조

Article 30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1.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위원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2.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o the Committee, other than an election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submit their nominations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within three months.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 31 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 32 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 조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 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제 34 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 35 조

이사회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with an indication of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no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rticle 31

1. The Committee may not include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2. In the election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mbership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Article 32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30, paragraph 4.

2. Elections at the expiry of offic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3

1.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a member of the Committee has ceased to carry out his functions for any cause other than absence of a temporary character,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declare the seat of that member to be vacant.

2.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from the date of death or the date on which the resignation takes effect.

Article 34

1. When a vacan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nd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o be replaced does not expire within six months of the declaration of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within two months submit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vacancy.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election to fill the vacancy shall then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3. A member of the Committee elected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member who vacated the seat on the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rticle 3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Article 3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venant.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 38 조

이사회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39 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4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Article 37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2.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3.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Article 38

Every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mmittee that he will perform his function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Article 39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 (a) Twelv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40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 (a)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b) 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4.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41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 (a) I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in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42 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Article 42

1. (a) If a matter referred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s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Committe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he good offic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present Covenant;

(b)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persons accept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whom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or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3.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 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5. The secretaria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shall also service the commissions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6.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7.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having been seized of the matter, it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for communication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et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within twelve months, it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status of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b)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c)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d) If the Commission's report is submitted under subparagraph (c),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the receipt of the report, notif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hether or not they accept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1.

9.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43 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44 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와 설립현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현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 46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is article.

Article 4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42,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4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y or under the constituent instruments and the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Article 4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PART V

Article 46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 48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50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2 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7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PART VI

Article 48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9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5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51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2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48,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 53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하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증등본을 송부한다.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48;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4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51.

Article 53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B.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1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 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B.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 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venant)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ble the Human Rights Committee set up in part IV of the Coven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as provided in the present Protocol,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s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Article 1

A State Party to the Covenant that becomes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Party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to the Covenant which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 individuals who claim that any of their rights enumerated in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and who have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may submit a written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rticle 3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admissible any communication under the present Protocol which is anonymous, or which it considers to b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제 4 조

1. 제3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5 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 의견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 6 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 7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9 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Article 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under the present Protocol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 of the Covenant.

2.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Article 5

1.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the light of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individual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 from an individual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b) The individual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3.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4.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individual.

Article 6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annual report under article 45 of the Covenant a summary of its activiti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7

Pending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resolution 1514 (XV)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4 December 1960 concerning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in no way limit the right of petition granted to these peoples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8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which has signed the Covenan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by any State which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venant.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which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venant.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9

1. Subjec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11 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3 조

제8조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이본이 동등히 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Article 1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11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12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Denunci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ny commun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denunciation.

Article 13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8, paragraph 5, of the present Protocol,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8;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under article 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11;
- (c) Denunciations under article 12.

Article 14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of the Covenant.

특집 :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제45차 회의의 참관기

천 정 배

1. 머리말

1992년 7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국제적 토의가 이루어졌다.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가 7월 13일부터 3주일 동안 계속될 제45차 회의를 시작해 그 의안과 토의 순서를 확정된 뒤 첫날 오후부터 우리 정부의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1991년 7월 우리 정부가 제출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초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것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제6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도 나라 안팎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 및 변명이 이어져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해외의 수많은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갖가지 개선책

* 인권이사회의 회의록은 번역하여, 이 책 뒷부분에 '자료'로 실었다.

을 제시했다. 그 반면에 정부는 한결같이 제6공화국에서는 거의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돼 더이상 나라 안팎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비난을 제기하는 단체들을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뿐 눈에 띌 만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정부측의 공세적 변명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그 견해에 동조하는 여론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회의 이번 회의는 그 공식성과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열리게 되었다. 뒤에 살펴듯이 이 회의는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비준해 우리 법체계의 일부로 채택한 국제조약에 따라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회의에서 제시되거나 채택되는 권고사항들은 민간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고사항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단순히 참고사항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회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는 어느 모로 보든지 우리 정부에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참여했다. 뒤에 살펴듯이 이사회는 각 나라 정부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 정부에 의해 지명된 사람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가 그 검토 대상이 되었고 이사회의 위원들과 정부의 대표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처지에서 이 회의가 객관성을 잃은 정부 비난의 마당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온 재야 인권단체들로서는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음을 아쉬워해야 했다.

이사회의 위원들은 고매한 인격과 인권분야의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로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명형태를 고려해 골고루 선출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그 선출 이전에 이미 인권분야의 권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들도 많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으로 유수한 인권 관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며 국제사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중대한 뜻을 지닌 가운데 차분하게 그 시

작을 맞았던 것이다.

2. 회의의 성격

이번 회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인권규약'이라 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규약과 그것에 대한 한국의 비준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¹⁾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일찍이 1947년 1월 국제인권장전을 기초하기로 하고 그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선언과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조약 등을 담기로 했다. 그 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인권위원회의 오랜 작업 끝에 1966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 제2,200호로 흔히 "국제인권규약"이라 불리고 있는 조약이 채택됐으며 이 조약은 여러 나라의 비준을 거쳐 1976년에 발효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 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A규약'이라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규약'이라 불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된 인권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이 그것이다. A규약은 그 자체에 당사국이 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사국의 국민이 그 정부에 대해 즉각 그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반면에 B규약(우리가 논의하는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그 규약의 효력 발생 즉시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규약(B규약)은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규약

1) 이하의 논의는 유현석, 「국제인권규약과 법률사무」, 「인권과 정의」, 1990년 9월호 및 조용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5호, 창작과 비평사, 1992년 1월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다.

의 용어는 국내법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뜻을 지니며 당사국은 그 국내법의 해석을 구실삼아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에 인권규약을 준수할 당사국의 하나로 가입하는 절차를 마쳤고 1990년 7월 10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소권의 보장, 이중처벌 금지 및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3개 조항에 대해서는 그 가입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하기 위함이다.²⁾

인권규약은 그 실시에 관한 여러 직무를 수행할 기구로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이사회'라 함)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당사국이 지명 한 사람 중에서 당사국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며 2년마다 반수씩 새로 선출된다. 이들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면서 서로 다른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를 대표하도록" 선출되며 정부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규약은 당사국이 그 발효 후 1년 이내와 그 후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에 각각 인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최초보고서 제출 후 5년마다 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보고서에는 당사국이 "인권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성취된 진전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것들도 기재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일반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당사국의 대표가 출석할 수 있다. 그 대표는 이사회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관해 발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반적 의견(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을 당사국에 보냄과 동

2) 정부보고서 제265항 (b) 및 (c)

시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국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케 하고 이사회가 그것을 검토하는 목적은 "규약의 실시와 관해 당사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헌장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인권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인 1991년 7월 최초보고서(정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당초 1992년 3월에 열리는 회기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후 우리 정부가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그 검토 일정을 1992년 7월의 제45차 회기로 연기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3. 한국정부와 재야단체의 준비과정과 내용

정부보고서의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고 인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직원들로 실무집단이 구성, 작성되었다고 한다.³⁾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법무부 인권과에 소속된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고서는 1991년 9월 20일자 유엔 간행물(CCPR/C/68/Add.1)로서 영문으로 배포됐는데 목차를 빼고 70쪽에 이르고 있다.⁴⁾ 정부보고서는 1부터 312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권규약에 따라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서문(Introduction)」 다음에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등을 언급한 '일반적 의견(General Comments)'을 제시하고, 이어서 「인권규약의 제1조 내지 제27조의 적용에 관한 정보(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1 to 27 of the Covenant)」라는 제목 아래에 인권규약의 각 조문에 관련된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변의 관계자들은 정부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것

이 규약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법조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실제의 인권보장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변은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충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와 우리 정부가 참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교협)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작성해 미리 이사회와 그 위원들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⁵⁾

민변과 한교협은 1991년 11월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과 한교협 관계자들로 반박보고서 준비팀을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한글판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러 재야단체들에 대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와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들었던 반박보고서들도 수집했다. 준비팀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1992년 2월 초에 보고서의 작성을 끝낼 것을 목표로 작업에 몰두하던 1992년 1월 중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일정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3월에서 7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에 준비팀은 반박보고서에 작성 완료시기를 1992년 5월 초로 늦춰 더욱 충실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2년 3월 말에 반박보고서 한글판 원고가 거의 마련됐으며 4월 초에는 영문판의 작성에 들어갔다. 영문판 작업에는 기존의 준비팀 이외에도 미국에서 자란 한국 동포 2세대들 여러 명이 가세했다. 이 확대된 준비팀은 마지막까지 이미 만든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서 최선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5월 초에 이르러서는 밤샘작업을 되풀이한 끝에 마침내 5월 8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반박보고서'라

3) 1992년 7월 13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 박수길 대사가 한 발언

4) 정부는 정부보고서의 한글판도 간행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영문판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5) 인권규약 당사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해 그 나라 안팎의 인권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작성한 선례가 많이 있다.

합"라는 이름을 붙인 285항으로 된 122쪽의 영문보고서를 이사회와 그 위원들 앞으로 발송했다. 이어서 5월 중순 반박보고서의 한글판이 완성되었고 민변과 한교협은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공표했다.⁶⁾

반박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인권상황에 대해 별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회와 위원 등 외국인에게 우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목표 아래 씌어졌다. 그 집필자들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법률과 그 운용의 실상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반박보고서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규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등을 설명한 뒤, 제2부에서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과정 등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제3부와 제4부에서는 각각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정신적 정치적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 등 그밖의 기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민간단체가 법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저작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반박보고서는 이런 류의 첫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들은 반박보고서의 준비 당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영문판이 완성된 직후 민변 관계자에게 그것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⁷⁾ 민변은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당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는 선의에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민변과 한교협이 반박보고서를 공표하는 1992년 6월 2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으로 추정되는 정부당국은 그날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반박보고서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적대적인 낱말들을 동원해 반박보고서와 민변을 악의적으로 매도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날 즉시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대해 정부보고서의 내용과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공식 제의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⁸⁾

6) 그 후 반박보고서는 1992년 7월 「한국인권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역사비평사에 의해 출판·시판되고 있다.
7) 법무부는 신문보도 등으로 반박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알려지자 반박보고서를 아직 검토하지 못했음이 분명한 시점인 1992년 5월 13일에 서울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발행의 「국제인권보」 1992년 5월 15일자를 참조하라.

민변과 한교협은 이사회회의 이번 회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결정해, 민변 소속의 박원순, 조용환 변호사 및 한교협 인권위원회의 김찬국 위원장과 김경남 사무국장 등이 참관케 되었다. 민변의 참관단은 이사회회의 위원들이 정부 대표에게 질문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을 작성해 회의 시작 직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회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결정해 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와 인권위원인 필자가 참관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참관단은 회의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보고하기 위해 비디오촬영을 했다.

그밖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국에 있는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Stop Torture in Korea)도 각기 보고서를 작성해 미리 이사회에 제출했다.⁹⁾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박수길 대사와 문봉주 참사관, 법무부 인권과장 유국현 고등검찰관, 외무부 유엔2과 정달호 과장 등을 선정했다.¹⁰⁾

4. 인권이사회회의 진행

7월 13일 오후 3시 15분경 이사회회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인 포카르(Fausto Pocar; 이탈리아)를 비롯한 14명의 위원과 정부대표단이 정해진 자리에 앉았고, 방청석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및 한교협의 참관단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법률가협회(ICJ) 등 국제인권단체들 및 일본의 장의군 후원회 대표 등이 자리를 메웠다. 그밖에 남북 양측 외교관들과 유럽에 있는 한국유학생 몇 사람도 눈에 띄었다.

필자 등은 사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가 과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고 회의장면도 녹취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지에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 미리 출입증을 얻어두기

8) 반박보고서를 둘러싼 민변과 정부당국 사이의 논란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92년 6월 4일자 19면에 간략히 보도되었다.
9)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South Korea :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라는 이름으로,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의 보고서는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and the System of Ideological Conversion in Korea"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10) 정부대표단의 준비작업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보」 1992년 8월 15일자를 참조하라.

도 했다. 막상 제네바 유엔센터에 도착해보니 우리의 조바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출입증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출입문에 있는 경비원에게 한 두 마디 형식적인 말로 용무를 밝히기만 하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회의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데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폐쇄와 통제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공개와 자유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장의 개회선언과 한국정부 대표단의 소개에 이어 대표단장인 박수길 대사가 약 30분 동안 정부보고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했다.

정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1988년 초 민주화를 목표로 설정한 헌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보호 분야에서 이루어진 큰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 민주주의원칙을 구현하고 인권의 보호를 신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됐다. 대통령직선제 채택, 국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립, 법률구조의 제도화, 형법 개정 준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의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주주의의 법 지배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최대한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긴장이다. 북한이 남한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존재이유를 가지며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인권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¹¹⁾에 가입할 계획이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의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며 이 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각종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박대사의 보고가 끝나자 출석한 이사회 위원들이 차례로 정부 대표단에게 질문을 했다. 첫 질문자인 안도(Nisuke Ando; 일본)는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와 같은 지역권에 속하는 위원이 먼저 발언하는 것이 이사회회의 관행이므로 자신이 나서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정부보고서가 잘 만들어졌으며 한국이 인권규약뿐만 아니라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고 인권규약 제41조에 따른 선언을 한 것은, 일본정부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대단한 일로서 높이 평가한다

11)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87년 6월 28일 발표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인격을 손상하는 처우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을 말한다.

고 칭찬했다.¹²⁾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한국에 해악을 끼친 일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필자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 안도 위원이 한국에 대한 사과를 입에 올리는 데 대해 내심 언짢아졌다. 그러나 그의 한국정부에 대한 칭찬과 사과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매서운 비판이 혹시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비롯됐음이 곧 밝혀졌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정확한 인식을 가진 듯 여러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다양한 질문을 했다(이하 위원들의 질문을 그 순서대로 요약해 일련번호를 붙여 소개하며 중복된 질문이라도 그 낱말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되도록 그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① 인권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인권규약보다 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인권규약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② 한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밖의 다른 이유, 예컨대 정치적 견해에 의하여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③ 여성 차별의 실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한 경우와 한국 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경우를 비교해볼 때 그들 사이의 자녀의 국적 취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부재산제도에 관해 한국정부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④ 인권규약 제4조 제2항은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될 권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국법률상 어떤 것들을 그러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가?

⑤ 고문과 가혹행위에 관해 본인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몇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한다. 정부보고서에 언급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 때문에 임의성없는 자백을 하고 검찰에서 그 강요된 정신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같은 자백을 한 경우에 검찰에서 고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에

12) 선택의정서 가입과 인권규약 제41조에 다른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는 조용환, 앞 논문을 참조하라.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

⑥ 정부보고서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수사기관의 실제관행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를 말해달라. 구속된 자의 가족이 얼마만에 구속사실을 알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형사책임은 지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인가?

⑦ 남한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가?

⑧ '보트 피플'에 대한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설명하라.

⑨ 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을 설명하라.

⑩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만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어느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가?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상소할 수 있다면 왜 다른 덜 무거운 형을 받은 자는 상소를 못하게 하고 있는가?

⑪ 국가보안법에 관해 본인은 한국전쟁의 잔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변했고 또한 변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환영하지만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여전히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몇몇 조항은 너무 모호하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인이 가진 정보에 따르면 사람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시도가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매우 지나치다.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 이 점에 관해 언급해달라.

⑫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된 뒤 교원의 노동조합을 해산하려는 등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가?

⑬ 미성년자를 더욱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는가?

⑭ 언론인에게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서 디미트리제비크(Vojin Dimitrijevic ; 유고슬라비아)은 정부보고서가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불리한 국제사정 탓에 생기는 권위주의 등으로부터 사회를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여러 곳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하고 정부 대표단이 법률보다 실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한 뒤 질문에 들어갔다.

다음은 그의 질문 요지이다.

⑮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⑯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리스트를 제출하라.

⑰ 어떤 조건에서 낙태가 허용되는지 알려달라.

⑱ 국가보안 사범의 경우 법원의 몇몇 판결들은 오직 자백에만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백을 하도록 만드는 처우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라.

⑲ 일반 범죄의 구속기간이 최장 30일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 그것을 50일까지로 연장하고 있는 것은, '비밀경찰' 또는 '정치경찰'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처럼 긴 기간에 대한 정확한 세부규정과 그 기간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라.

⑳ 인권규약의 조항에 관련된 중심적인 요점은 국가보안법이다. 개정된 법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부터 모호하며,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㉑ 국가보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범죄에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개정 법률의 규정은 헌법과 인권규약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㉒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반국가단체가 그토록 넓게 정의되며, 공산주의나 그와 비슷한 것의 범주에 드는 표현물을 지니고 읽어 정보를 얻는 것이 금지된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보고서는 한국에 검열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달리 금서목록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른 채 처벌받게 될 위협에 빠져 있다. 제반 공연, 영화, 정기간행물 및 서적 등과 관

련된 검열 가능성이 있는지와 출판,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한다는 형식으로 서적에 대한 예방적 검열의 가능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라.

㉓ 국가보안법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는 인권규약 제17조와 제19조에 비추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 문제이다.

아길라(Francisco Jose Aguilar Urbina ; 코스타리카)는 정부보고서가 잘 만들어져 있으나 실제적인 한국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의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비판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라.

㉕ 외국인은 예외없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가?

㉖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형벌법규는 무효로 선언된다는 규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㉗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해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㉘ 매춘을 위해 부녀를 획득하는 행위도 처벌되고 있는가? 법률전문직과 정치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률이 있는가?

㉙ 헌법상 비상사태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이르기까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듯하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인권규약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규약이 헌법에 우선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인권규약은 직접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비상시의 권리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의 조항들은 어느 정도 인권규약에 합치되는가?

㉚ 정부보고서는 형법과 "그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만 사형선고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규정과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국가보안법이 50개나 되는 범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도에게도 사형을 과하고 있다. 사형선고

를 받은 자를 구금하는 것은 그에 대한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정부보고서의 설명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

㉛ 세 종류의 전염병 환자의 권리는 실제상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

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 기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라.

㉝ 납치행위는 처벌되는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라.

㉞ 한국에 정치범은 몇 명이 있는가? 약 1,300명이라는 정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라.

㉟ 재소자에 대한 등급분류제도가 있는가? 재소자의 사상전향에 따라 그 등급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독거 수용을 규율하는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라.

㊱ 주민등록법과 그것의 보안관찰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㊲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의 실제 효과는 무엇인가?

㊳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그에게 소송준비를 할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가?

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한데 이 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라.

㊵ 한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이 있는가?

㊶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인권규약에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

㊷ 행위무능력자로 선언된 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라.

㊸ 교사와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있다. 해산된 정당과 같은 정치적 강령을 지닌 정당의 설립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정당들이 금지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밖에도 아길라는 위에 본 질문 ①, ②, ⑤ 및 ㉑ 등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

샤페이(Omran El Shafei ; 이집트)는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을 환영하며 정부보고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사회에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억압적인 국가였는데 이제 이 자리에 나옴으로써 하나의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기를 희망한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④④ 인권의 옹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국가기구가 있는가?
- ④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법원은 법률이 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기할 것인가?
- ④⑥ 법관의 채용, 임기 및 해임 등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 법원의 독립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

그는 마지막으로 장래의 정부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보안관찰법, 노동쟁의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가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이들 법률은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왔으나 앞으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국 대표단도 동의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브로마티스(Andreas V. Mavrommatis ; 키프로스)는 다른 위원들이 거의 모든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남·북의 차이, 장기복역 정치범,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표현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보고서가 매우 훌륭하지만 한국의 실제 상황이나 법 집행의 실제와 난점에 관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그는 인권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평등권, 사형 사법권의 독립 및 군사법원과의 관련 등을 언급했다.

뮐러슨(Rein A. Myullerson ; 러시아)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최근 한국이 보인 노력에 감사하며 정부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④⑦ 민족자결권이란 독립된 국가를 세울 권리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신들의 경제·사회·정치·문화체제를 결정함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 ④⑧ 남북 통일에 관해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은 무엇인가?
- ④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

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 예는 얼마나 되는가?

- ⑤⑧ 문화적 영역에서 '합리적 차별' 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 '합리적 차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⑤⑨ 비상시에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가 사실상 유보되는 일은 없는가?
- ⑥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들인가?
- ⑥⑪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라. 안기부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
- ⑥⑫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재판없이 매우 장기간 구금되는 예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법률상 구금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 ⑥⑬ 국가보안법 제4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경우 대법원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기밀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 기밀의 범위가 극히 모호하다. 이런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규약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 ⑥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박기래라는 사람이 고문을 못이겨 행한 자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 ⑥⑮ 방송법의 목적 가운데 '여론형성'을 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⑥⑯ 세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인가?

그밖에 그녀는 위에서 본 질문 ①, ②① 및 ④⑥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 이상 위원 8명의 발언이 끝났을 때 이미 예정된 산회시각인 오후 6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장은 즉석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당초 예정에 없던 다음날(7월 14일) 오전 회의를 제안해 양해를 얻은 뒤 산회를 선언했다.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경 회의가 속개되자 헤른들(Kurt Herndl ; 오스트리아)이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보고서가 훌륭하고 그것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실상은 회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 특히 선택의정서 가입을 축하한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⑥⑰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 되어 있는 청원은 어떤 의의를 가지며 청원과 동시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가?
- ⑥⑱ 검사가 인권을 옹호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검찰

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가?

- ⑤⑩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 ⑤⑪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다. 구속기간의 연장 규정은 무죄추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 ⑤⑫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며 그 재판을 규율하는 '비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밖에 그는 위에 본 질문 ②, ⑦ 및 ④⑥ 등과 비슷한 질문을 한 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평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상황변화는 이 법을 덜 필요하게 하고 있으며 이 법은 북한과 연루된 사람뿐 아니라, 맑스의 저작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옥하는 등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자에게도 사용했다.

사디(Waleed Sadi ; 요르단)는 한국이 정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며 특히 대표단에 법무부의 인권과장이 포함된 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⑤⑳ 인권규약을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인권규약을 채택한 이래 달라진 상황이 있는가? 인권규약에 입각한 판례가 있는가?
- ㉑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 ㉒ 대법원은 제법의 적법성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듯한데 사실인가?

또한 그는 한국이 인권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가압유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샤네(Christine Chanet ; 프랑스)는 정부보고서가 헌법상 인권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인권 신장에서 부딪치는 일상적인 장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일부 규정 유보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 ㉓ 한국정부는 인권규약의 규정과 정신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관계행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설치된 인권상담센터의 임무는 무엇이며 그것과 검사의 소추업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⑥⑲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적용범위는 인권규약 제26조보다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의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⑦⑰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를 보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5년의 징역에서부터 사형까지 넓은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는가? 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나 위증을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에 정해진 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만일 귀하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해 무고나 위증을 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 ⑦⑱ 정부보고서는 자백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 아래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보장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는 말인가?
- ⑦⑳ 정부보고서는 재소자의 교화에 해로운 때를 제외하고는 재소자가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장의균을 비롯한 사상범의 경우 그러한 접견이 거절되었다. 그렇다면 사상범이란 무엇이며, 사상이 교화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인가?
- 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형벌 법규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㉒ 한국에는 소수민족이 없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은 사실인가?

그밖에 그는 위에서 본 질문 ⑥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 히긴스(Rosalyn Higgins ; 영국)는 정부보고서가 훌륭하지만 공식적인 정보와 현실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주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겠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 ㉓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이사회는 논평을 어떻게 한국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인가? 선택의정서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이사회가 밝히는 의견을 한국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㉔ 일부 인권규약 규정에 대한 한국의 유보조치를 철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 ⑦⑦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에 관해 경찰에 어떤 지침이 내려져 있는가?
- ⑦⑧ 법 집행 공무원에게 고문을 하지 말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과 관련해, 국제적인 인권보장 의무에 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⑦⑨ 공무원 29명이 고문혐의로 구속됐다고 했는데 몇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어떤 형벌이 선고됐는가? 누가 그러한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가? 그 공무원이 속하는 기관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있는가?
- ⑧⑩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라.
- ⑧⑪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너무 길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50일의 구속기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불과 며칠로 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 ⑧⑫ 과거에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기수들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라.
- ⑧⑬ 검찰에 공간부를 두고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처럼 상당히 넓은 범위의 범죄를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관행은 무죄추정에 반하는 작용을 하는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낸다.
- ⑧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에서 무죄추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⑧⑮ 형사재판이 종종 구치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 ⑧⑯ 많은 나라에서 변호사의 부족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방어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가족 또는 친구와의 비공개접견이 매우 중요한데 가끔 그런 접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 ⑧⑰ 아직도 미전향정치범이 대전교도소에 약 40명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람의 견해와 사상을 전향시키겠다는 것은 인권규약에 위반된다.
- ⑧⑱ 최근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것은 좋은 일이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법은 정부나 국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주의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자주 행사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해 논평하라.
- ⑧㉑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왜 사전허가를 요하며 얼마나 자주 그런 허가가 거부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기계적으로 거부된다는데 사실인가?

⑨⑩ 형 집행을 완료했다면 그것으로 끝인데 1989년에 제정된 보안관찰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인권규약과 합치되는지 설명하라.

발레호(Julio Prado Vallejo ; 에쿠아도르)는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을 환영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국내법과 현실간에 많은 괴리가 있는 듯하고 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장애를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⑨①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협상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 ⑨② 한국에서 고문에 대한 많은 고소가 제기됐으나 수사가 지연되어 왔다.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이 있는가? 고문 주장이 제기된 때 적십자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재소자를 접견해 사실 여부를 결정할 길이 있는가?
- ⑨③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공공복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 ⑨④ 최장 구속기간은 얼마이며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⑨⑤ 한국에 정치범은 얼마나 있는가? 30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사상범 가운데 감형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공산주의자가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승인된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질문⑨⑥과 비슷한 질문을 했고, 북한사람과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할 수 있고 그 구속기간도 5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웨너그렌(Bertil Wennergren ; 스웨덴)은 정부보고서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⑨⑥ 행정소송의 경우에 행정관청의 심판이 있고 나서 막바로 대법원에 제소되는 것인가?
- ⑨⑦ 18세 미만자에게도 사형을 과할 수 있는가? 사형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가?

- ⑨⑧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허용된다는데 '우생학적 사유'란 무슨 뜻인가? 태아에 대한 진단법이 있는가?
- ⑨⑨ 징역형의 정의를 구성하는 '노역'은 무엇인가?
- ⑩① 행정법에 언급된 '방성구'는 무엇인가?
- ⑩② 재소자에 대한 독거수용의 조건과 그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라.
- ⑩③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데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⑩④ 행정법 제1조가 그 목적을 "건전한 국민사상을 함양한다"고 함은 사상주입이나 세뇌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전한 국민사상'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상과 같이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오전 11시 10분경 의장은 휴회를 선포했다. 니디아예(Ndiaye ; 세네갈)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박수길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사회는 7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부터 정부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회의를 속개했다.

민지 위원들이 이틀 동안 제기한 질문에 대한 정부대표의 답변이 있었다. 박수길 대사가 일반적인 논평을 한 뒤 유국현 과장이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1시간 30분 남짓 계속된 발언에서 정부대표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식의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주의는 실현되었고 정치범은 없다"는 것이었다. 박대사는 민변과 한교협의 반박보고서를 겨냥하는 듯 "어느 민간단체의 문건이 한국에서 맑스와 레닌의 저서뿐 아니라 카(E. H. Carr)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저작들도 금서라고 한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짓(the height of absurdity)이며 자신도 학생시절에 이런 책들을 읽었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았으며 한국 법체계에서 단순히 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식 이하의 사실 왜곡을 하기도 했다. 지면 제약으로 말미암아 정부대표의 답변에 대한 더이상의 소개는 생략한다.

이어서 정부대표의 답변에 대한 위원들의 논평이 시작되었다. 위원들의 발언순서에 따라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평에 대해서도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인다.

- ① 한국 헌법이 양심의 자유는 언급하고 있으나 사상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서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권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 ②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별도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법관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관련법규 개정을 고려하라.
- ③ 국가보안법 및 그것에 따른 구속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 특수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이상 웨너그렌)
- ④ 정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공산주의 등 비민주적인 국가의 건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유로운 수단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음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폭력의 사용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법률로써 대처해야 한다.
- ⑤ 보안관찰법에 관해서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 ⑥ 간첩의 개념에 관해 국가기밀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남용이 우려된다.
- ⑦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 ⑧ 경쟁적인 이념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재소자의 교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념을 이유로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규정에 어긋난다.
- ⑨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는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라.
- ⑩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길고 그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할 문제이다.(이상 허긴스)
- ⑪ 북한방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 사용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선전하고 있는 이념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12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 있으며 특별법은 필요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13 정부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선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어떤 선전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단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법 규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상 밀러슨)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7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14 한국의 복잡한 정치상황이 법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한 정치상황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항상 최선의 정책은 정상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가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법률로써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다루려는 문제를 일반 형법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

15 경찰의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 국가보안법은 국내법 전반을 침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상 헤르틀)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7 및 10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17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정치범이 있다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정부대표는 '정부 전복의 기도'를 언급했는데, 정부 전복이란 모든 야당의 합법적인 목표이며 민주주의 절차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것을 위해 폭력이 사용될 때에만 비난할 수 있다. 정치범을 가두어두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를 투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기 위해 언급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은 매우 한탄할 일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테러리즘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나 그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규약은 비상사태에 약간의 권리제한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18 국가보안법 제4조와 제7조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떨칠 수 없으며 이는 인권규약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이상 샤네)
(그밖에도 그녀는 위에서 본 논평 3, 6, 7 및 10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19 남녀간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0 사상전향제도는 부당하다.

21 교사와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22 국제노동기구의 많은 조약들이 장래 정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23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행위에 관한 매우 모호한 용어와 넓은 범주는 특히 위협하다.

24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더 좋은 것임을 설득하고 독재체제와 분명하게 대비되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본과 노동조합의 대립 등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인 까닭에 다른 민족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권의 추구는 관용과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 (이상 안도)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10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25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법으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얻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규약을 극악하게 위반하고 있다.

26 국가보안법이 50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27 사상전향제도는 인권규약 제14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상 아길라)

28 비상사태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29 국가보안법은 해석과 적용에서 남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범과 양심수에 대한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우는 부당하다. (이상 발레호)

30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이 인권규약의 근본이념을 벗어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러한 논리는 과거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31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보안관찰 및 사상전향제도는 부당하다. (이상 디미트리체비)

32 인권규약에 맞추어 인권을 신장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 한국에는 인권문화의 맹아가 이미 존재한다. 이 결정의 실천이 경찰과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어 교육이 요청된다. (이상 사디)

33 한국은 인권규약에 더욱 합치하는 법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 느디아예)

34 특히 헌법재판소 활동의 결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적극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35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사형, 집회의 권리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회기 말에 채택될 서면의 논평만이 공식문서에 반영되는 의견으로 간주되며 그 논평이 한국의 입법과 법률 개정에도 반영되리라 확신한다. (이상 포카르 의장)

위원들의 논평이 끝난 뒤 박수길 대사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격적 자세를 잃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에 찬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재확인한 뒤, 위원들의 논평을 정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6시 20분경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사흘 동안 합계 약 7시간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스럽지만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법과 인권옹호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날카로운 비판과 적절한 충고를 제시하는 대다수 위원들의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청석에서 회의내용을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모습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중요한 회의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의견서 요지

이사회는 7월 29일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의견"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을 문건으로 채택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번호는 CCPR/C/79/Add.6이며 1992. 7. 29. 이사회의 제45차 회기 중

1173회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머리말

이사회는 정부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고 잘 정리된 데 사의를 표한다. 정부보고서는 법령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규약의 시행에 관한 실제 사정과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장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긍정적 측면

최근 한국이 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며 인권규약 제41조에 규정된 선언을 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현재 한국이 인권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가입유보조치의 철폐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법률구조의 제공에 있어,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 현재는 내부의 정치적 반대도 종전보다 더 잘 용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구로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규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한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최근의 남북합의서의 채택은 긍정적인 진전인 듯하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불안과 무력도발의 위협이 실재하므로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주요한 관심사

1 한국의 헌법은 인권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은 인권규약 제2조 및 제26조에 비해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들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될 수 없다는 주장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지속적인 적용에 관해 이사회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특수상황이라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사회는 정상적인 법률, 즉 일반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몇몇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정되어 있어 참으로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3 이사회는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행사 정도 및 특히 북한방문과 관련된 인권규약 제12조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이사

회는 재소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들이 정상적인 의미의 교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강요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의 규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간첩의 정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기밀의 정의 또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④ 이사회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많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강도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규약 제6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기소 전의 긴 조사기간은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에 위반된다. 그밖의 관심분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지속적인 투옥,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규약 제15조가 다루고 있는 형벌원칙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 등이다.

제안과 권고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인권의 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해 이사회는 한국이 그의 입법을 인권규약에 더욱 합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고 형법을 인권규약 제15조에 더욱 합치하도록 하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인권규약 제14조에 대한 광범위한 유보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맺음말

이번 회의에서 이사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그동안 나라 안팎의 단체들이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해온 사항들이 단순히 편파적인 주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위원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및 사상전향제도, 사형문제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진지하고 예리한 비판과 함께 우정어린 권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보인 정부대표들의 자세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실망스러웠다. 정부가 정식 가입한 인권규약의 규범력을 승인하고 그 일반원칙

에 따라 국내법규와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는 도리어 인권규약을 한국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와 법원,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남·북의 긴장이라는 현실상황에 압도되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긍정한 뒤 그것에 맞추어 헌법을 해석하는 본말전도 행위를 해온 것이 생각났다. 정부는 이런 낡은 관행을 국제무대에서까지 확장하려고 했지만 이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된 것이다.

민변과 한교협이 작성한 반박보고서는 이번 회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대표의 발언내용이 정부보고서에 비해 훨씬 충실해진 것은 반박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예컨대 반박보고서는 정부보고서가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정부대표는 이번 회의의 첫날 그러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위원들이 한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도 반박보고서가 도움이 된 듯하다. 몇몇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반박보고서를 꺼내놓고 참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원들이 권고하거나 시사한 사항들을 우리의 법체제와 그 운용과정에 반영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위원들의 발언은 그 마디마디가 주옥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언급된 바를 폭넓게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회의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재야인권단체 사이에 그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측은 이사회가 제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에 따른 인권신장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위원 중 일부는 여러가지 지엽적인 질문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¹³⁾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록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특히 이사회의 공식의견에서 제기된 제안과 권고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인권규약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서도 인권선진국임을 위장하기 위해 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나라 안팎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며 국제노동기구의 각종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13) 유국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한국 인권」, 『법률신문』 1992년 8월 20일자 및 8월 24일자 참조

하고 있고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대표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시바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현실이 서로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과 인권의 일반원칙 또는 발전방향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경제체제가 다른 나라들에서 온 위원들은 그러한 일반원칙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하고 논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은, 현실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세계사의 발전방향에서 벗어난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이다. [변호사]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SR.1150
17 July 1992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Forty-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1150th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Monday, 13 July 1992, at 3 p.m.

Chairman: Mr. POCAR

CONTEN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cord is subject to correction.

Corrections should be submitted in one of the working languages. They
should be set forth in a memorandum and also incorporated in a copy of the
record. They should be sent within one week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to
the Official Records Editing Section, room E.4108, Palais des Nations, Geneva.

Any corrections to the records of the public meetings of the Committee at
this session will be consolidated in a single corrigendum, to be issued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ssion.

being mad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achieve gradual and peaceful social development in a direction that led away from all forms of authoritarianism, repression and constraint deriving from international circumstances. His chief regret concerning the document before the Committee was that - perhaps understandably in view of their recent promulgation and because of their importance as a found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 it dwelt rather too much on the letter of the new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rovisions and was insufficiently detailed with regard to the factual situation and specific actions to guarantee those rights and eliminate inadmissible practices. The state of affairs with regard to prostitution (para. 67) was a case in point.

31. The statement in article 3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ited in paragraph 3 of the report, that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aken in conjunction with paragraph 5 of the report, was of considerable legal interest. He asked whether such non-enumerated provisions had actually been applied or invoked with the force of domestic laws since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nd whether the highest judicial bodies of the land had actually read into the Constitution some rights that formed part of the spirit of the times or of natural law.

32. Concerning article 6 of the report and the right to life, he noted from paragraph 101 of the report the provisions according to which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the death penalty, was enforced in the Republic of Korea. Welcoming the recent limitation of the categories of crime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he added that a cursory reading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led to the conclusion that an inordinate number of offences still carried that penalty, and requested details on the subject. Similarly, and in connection with paragraph 110 of the report, dealing with the subject of abortion, he asked in what circumstances abortion was not considered a crime.

33. With regard to article 7, he requested further information as to whether the non-admission of confessions derived from torture and other harsh treatment was fully effective.

34. It was not altogether clear from the report what restrictions were placed on pre-trial detention, but it seemed that such detention must not exceed 30 days in the case of ordinary offences and an additional 20 days, apparently to permit further investigations, where alleged offenc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involved. He commented that the lengthier period seemed hardly justifiable, given the experience, common to many countries, of the generally expeditious functioning of special investigatory agencies acting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35. As far as the Republic of Korea was concerned, it seemed to him that the central issue in the matter of guaranteeing the rights covered by the Covenant related to the actual statu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lbeit in its amended, "milder" form. The principal concerns which it addressed, especially in relation to articles 15 and 19 of the Covenant, were defined in somewhat vague terms which, in his view, could lend themselves to interpretations inconsistent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Covenant and result in sanctions for acts that might not be truly dangerous for the State, criminal

or even reprehensible, as well as undu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Further, as Mr. Ando had observed, certain pressures seemed on occasion to be applied to obtain the recantation of beliefs and other unseemly actions taken to inquire into people's thoughts. "Preventive" censorship in the form of banning certain forms of expression also appeared to be practised.

36. In conclusion, and notwithstanding the anxiety which he had expressed with regard to the overall impac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acknowledged that the comprehensive report before the Committee reflected a sincere endeavour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ositive developments following a period during which the country's very existence had indeed been threatened. He commended its systematic presentation and expressed the view that it would be of great assistance to the Committee an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ike in what he hoped would be a constructive dialogue.

37. Mr. AGUILAR URBINA joined in commending what he found to be a well-prepared report, likely to stimulate useful dialogue. Like the earlier speakers, however, it left him with a number of questions and doubts, more specifically because of its relative failure to describe the actual situation obtaining in the country.

38. Noting with interest, like the previous speaker, the statement that the Covenant had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without the enactment of separate domestic legislation (para. 5), he asked whether its provisions had in fact been applied or invoked before the courts. Notwithstanding the statement he had alluded to, could a national law in any way derogate from a provision of the Covenant?

39. Those concerns, which centred on the general status of the Covenant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prompted him to seek further clarification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well as other enactments which affected a number of the Covenant's provisions. He noted that a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laim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in effect, the country's Constitution.

40.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prohibited discrimination on various grounds which, however, seemed to be more limited than those laid down in the Covenant (para. 29 of the report). 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on that point. Paragraph 44 of the report said that foreigners were not allowed to hold public office; did that apply to all public posts, without exception?

41. Paragraph 48 of the report stated that any law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which wa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would be declared null and void. What consequences had that provision had? Did it, for example, apply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whose scope had now been restricted? He would also like to know whether prosecutors were subject to executive or to judicial authority.

42. Turning to article 3 on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he noted from paragraph 67 of the report that prostitution was a criminal off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e procurement of women for prostitution was also a criminal offence. Paragraph 69, deal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stated that women and men had enjoyed equal political righ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y was the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rather than the "Korean State"? Paragraphs 73 and 74 dealt with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legal profession and political life: he inquired whether there were any laws to protect women against discrimination in those fields.

43. With reference to article 4 of the Covenant, he noted tha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ident was empowered to enforce emergency measures only during the period when the survival of the State was at stake (para. 92 of the report). That was surely a very vague concept; it might eve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emergency measures could be prolonged until the two halves of the Korean nation had been reunited. Under article 76 (1)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could assume emergency powers in circumstances rather more wide-ranging than those laid down in the Covenant (para. 90 of the report). Would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ake precedence over the Constitution in such a case, and would the Covenant be applicable directly or only through the courts? To what extent were article 76 of the Constitution, and also article 37 (2), (which dealt with admissibl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itizens),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44. In respect of article 6 of the Covenant, dealing with the right to life, he noted that a large number of offences carried the death penalty in the Republic of Korea. Paragraph 103 stated that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under the Criminal Code and "the other related regulations", and he would welcome more details about the latter. In the same paragraph, it was stat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limited to crimes which threatened "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 he would like to know exactly which crimes were involved. In that connection, he understood that as many as 50 offenc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He was concerned to read in paragraph 109 of the report that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for robbery. Moreover, there had been no successful appeals against death sentences since 1986 (para. 108 of the report). 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atement in paragraph 113 that "the detention of persons sentenced to death is to secure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45. Paragraph 125 of the report described possible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people suffering from three categories of communicable diseases. He would like to know how the rights of those people were restricted in practice.

46. Turning to article 7 of the Covenant, he ask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decision of 1981 in which the Supreme Court had rejected a confession made under duress (para. 138 of the report). According to information he had received, there had been other cases where defendants had been tortured or otherwise ill-treated in order to extract a confession.

47. In respect of article 8 of the Covenant, he noted that it was a criminal offence to kidnap a person in order to take him out of the country (para. 141 of the report).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kidnapping alone was also a criminal offence. Paragraph 146 stated that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as not included in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under the Constitution, and 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on that point.

48. With reference to article 9 of the Covenant, he asked how many political prisoners there were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information in his possession, they numbered some 1,300.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referred to "preventive restrictions" which might be imposed in certain circumstances; what were those restrictions? He was concerned to note that people suspected of an offenc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could be detained without trial for up to 150 days. How was a prisoner's welfare guaranteed during that time?

49. In respect of article 10 of the Covenant,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ere were different categories of prisoner, and whether a prisoner might be transferred from one category to another, depending perhaps on his degree of ideological rehabilitation. What were the regulations governing solitary confinement?

50. He noted that the section of the report dealing with article 12 of the Covenant (paras. 192 and 193) made no men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para. 227). What were the provisions of that Law, and was it connected with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under which anyone suspected of offenc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could be kept under surveillance for up to two years?

51. In respect of article 14 of the Covenant, he noted tha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fendants had the right to a prompt trial (para. 200). However, undue haste might prevent the defendant from adequately preparing his defence. What were the practical effects of that provision? Paragraph 204 said that the State would appoint a defence counsel if the defendant was unable to do so but, in that case, was extra time allowed for the defence counsel to prepare the case? It appeared that the accused had no automatic right to question witnesses: indeed, the accused might be excluded from the court in some circumstances, which would preclude him from cross-examining the witness, even if permission was granted. 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on that point and also on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military courts.

52. In regard to article 18 of the Covenant, dealing with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he inquired whether anyone had been coerced into renouncing a belief in Communism in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concerned about the provisions of article 2 (1)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wondered how far it was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53. Finally, he would like more details about the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y by people who had been declared incompetent (para. 306). It was further stated that certain teachers and journalists were forbidden to found or join a political party and that new parties could not be established with the same political platform as a party which had been banned (para. 308). Which parties had already been banned, and why?

54. Mr. EL SHAFEI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 report

was a detailed one, which acknowledged the restriction of some fundament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did not tell the whole story. Admittedly, the country had been seriously affected by the cold war over a long period and had suffered bouts of insurgency, but they had been met by excessive and arbitrary use of force and by ill-treatment, torture and the abuse of authority to an extent which was unacceptable in a democratic country. It was to be hoped that the new attitude display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hown by its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its presence at the current session of the Committee, meant that the excesses of the past would never be repeated.

55. The Committee's main concern in considering the report was to establish how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made more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He would like to hear more about developments since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which would show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such changes.

56. He inquired whether there was a State bod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the delegation had stated that the Covenant had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What happened in cases of infringement of rights guaranteed by the Covenant but not recognized under domestic law? He asked whether there had been any court decisions based directly on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He would also like more details about measure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judges, particularly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ir appointment, tenure and removal.

57. It seem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only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on the basis of a decision by a lower court: could it also consider allegations of unconstitutionality submitted by individuals? He hoped that the Government would soon take action to make several of its law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the Labour Dispute Adjustment Act and the Act 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mo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He could see that such provisions had been necessary in the past, but the time had surely come to amend or repeal them.

58. Mr. MAVROMMATIS said that there had clearly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Nevertheless, the Committee had received allegations of a large number of violations, particularly in respec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n States, the rights of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tackle the problems had been demonstrated by its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eport before the Committee was a good one but, like many others, it made general statements without backing them up with specific facts and gave no details of the actual situation in the country or of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For example, the report stated that the Constitution did not conflict with the Covenant (para. 6), but it made no mention of other legislation. The Covenant had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without any need for specific domestic legislation to that effect (para. 5), but he wondered how that principle applied to the non-self-executing provisions of the Covenant.

59.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prohibited discrimination on a number of grounds (para. 29), but they did not include such fundamental criteria as race, colour, birth and, in particular, political belief, and he felt that the list should be enlarged.

60. There were a number of other points on which additional information was needed. In regard to the punishability of offences, for example, article 1 (1) of the Criminal Code seemed to contradict article 15 of the Covenant. With regard to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an explanation was needed of the various degrees of murder, not all of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heinous crimes justifying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More detailed information was required regarding mean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did judges enjoy security of tenure, were their emoluments safeguarded, did they have the right to resign from office, were they immune from civil charges in respect of their duties, and so forth? The importance of elaborate provisions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ould not be overemphasized. It would also be useful to have an explanation of the national legal structure, the jurisdiction and competence of the various courts, their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the right of appeal.

61. In regard to article 25 of the Covenant, the unexplained provision in the Political Party Act prohibiting certain teachers and journalists from becoming founders or members of a political party seemed to contradict not only the Covenant but also article 13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important to know whether it was the Constitution or the Political Party Act that prevailed.

62. Finally, the report seemed to make a rather restricted interpretat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minorities. It would be interesting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s religious composition.

63. Mr. MYULLERSON expressed appreciation of the efforts mad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years to promote human rights. The Government's initial report, which had been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contained a great deal of useful information. There were, however, certain gaps that should be mentioned.

64. The statement in the report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was an instance in which further information was needed.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covered not only their right to found independent States but also their entitlement to democracy and to choose their own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system. He wondered what the view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in that respect. In connection with the references in the report to Palestine and South Africa, he noted that Korea was itself a divided country and that problems of self-determination were very topical, given the movement towards reunification. It had been reported in the media that the conditions put forward by North Korea for reunification were not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ould be interesting to hear the Government's own conditions.

65. In regard to paragraph 29 of the report, he wondered why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mentioned only three grounds of discrimination. No mention was made, for example, of religion or political opinion, as referred to in the Covenant.

66. Paragraph 89 of the report, on emergency actions and orders and the possible proclamation of martial law, stated that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provided that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citizens could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aspects of fundamental rights. It did not, however, define those essential aspects. Paragraph 93 referred to control over the exercise of emergency powers but did not defin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or say what control was exercised over his powers.

67. Paragraph 149 of the report, on article 9 of the Covenant, described the rather wide grounds on which detention without a warrant was permitted, including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provision for extending the period of deten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54, would appear to violat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68. Regarding article 12 of the Covenant and the right of citizens to move freely, he asked whether there were any restrictions on visits by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orth Korea. He also asked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term of office of judges. He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had recently granted longer terms than the customary 10 years and noted that life tenure was one of the best guarantees of an independent judiciary. Regarding the reference to military courts in paragraph 211, he asked what categories of cases were tried by such courts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e term "extraordinary law".

69.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gave him some concern. While he understood the *raison d'être* for the Law, he felt that the recent changes in the overall situation might have made it seem less necessary. Apparently, the Law was used not only against agents of North Korea but also against critic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imple possession of Marxist literature being regarded as grounds for imprisonment.

70. Mr. SADI said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report constituted a dramatic break with the past and the start of a new era in the Republic of Korea. He had been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inclusion in the delegation of the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Di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71. He understood that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had generated considerable publicity within the country. Such publicity would help to guarante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he would welcome further information on the attention given to it. It was important for such publicity to be directed to the public at large as well as to professional legal circles. He wondered whether the situation had changed perceptibly since the Government had ratified the Covenan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times it had been invoked would enable the Committee to establish a link with the general evolu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72. Broad concern had been expressed by several members of the Committee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understood that its application was subject to judicial review but wondered how far the courts were able to control it. Apparently, the Supreme Court was not empowered to decide on the legality of martial law.

73. He hoped that the Government would shortly be able to withdraw its reservations to articles 14 and 22 of the Covenant. It had been said that the Confucian tradition prevai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ade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meet some of its treaty obligations, particularly in respect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ther countries with strong religious traditions had encountered similar problems and further information on the evolution of the situation and the course of public opinion would be useful to those countries.

74. Miss CHANET commended the report for its full and detailed accoun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but regretted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day-to-day difficulties encountered in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75. She associated herself with the questions asked by previous speakers about the hierarchy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those of the Constitution. She welcomed the Government's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23 and hoped that those to articles 14 and 22 would also be withdrawn shortly. She noted that the reservations were drafted in very broad terms although, according to the report, they applied to very specific cases: certain procedures in military trials which could not be appealed against except in the case of death sentences, and restrictions on the trade union rights of public officials. It ought to be possible to cover those two exceptions without having to enter a reservation in respect of the articles as a whole.

76. S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on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including the training and recruitment of judges and arrangement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where necessary.

77. Paragraph 18 of the report referred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ke the contents of the Covenant fully understood, particularly by public officials. She would welcome more information on the way the Government intended to inform the public in general of the provisions and spirit of the Covenant.

78. She noted from paragraph 48, on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at in cas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avour of the petition, new action had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She asked how many such cases had occurred. She would also like an explanation of the term "reasonable discrimination" used in paragraph 35.

79. In connection with article 4 of the Covenant, paragraph 94 of the report said that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an emergency did not refer explicitly to the absolute fundamental rights of article 4 of

the Covenant but to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s or rights referred to in the Constitution. She asked whether certain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or freedom from torture, could in fact be suspended during an emergency. She had a similar question in regard to article 6 and the death penalty. She recalled that it was the Committee's view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exceptional and applied only in the case of very serious crimes. Conceptions of what constituted a serious crime could differ. She would like to know, therefore, what crimes were still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since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Criminal Act.

80. Regarding article 9 of the Covenant, she would like more information on the role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She asked whether the Agency was empowered to detain and interrogate suspects.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 had been instances in which persons had been held for a very long time without trial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She asked whether there was any limit in the Law to the time of such detention. She noted that, according to paragraph 247 of the report, amendments had been adopted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1991 in order to reduce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she wondered whether that might pose any problems in regard to article 15 of the Covenant. Another question in respec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rose under article 4 and the definition of espionage. The crime of the betrayal of secrets, as included in the Law, was extremely vague. In case law, the Supreme Court seemed to define as secret any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information available. The revelation of such information could be regarded as a crime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which could in turn pose problems in regard to articles 15, 18 and 19 of the Covenant. Concerning article 14, the report stated that a confession under torture was not to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however, a person was currently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by reason of such a confession. She asked whether the delegation could confirm or deny the report. She noted that paragraph 242 stated that one of the purposes of the Broadcasting Act was "to help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asked for an explanation of that phrase. She wondered whether efforts to promote anti-communism were still current in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changes that had taken place in the world.

The meeting rose at 6 p.m.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SR.1154
20 July 1992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Forty-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1154th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Wednesday, 15 July 1992, at 3 p.m.

Chairman: Mr. POCAR

CONTEN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tinued)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This record is subject to correction.

Corrections should be submitted in one of the working languages. They should be set forth in a memorandum and also incorporated in a copy of the record. They should be sent within one week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to the Official Records Editing Section, room E.4108, Palais des Nations, Geneva.

Any corrections to the records of the public meetings of the Committee at this session will be consolidated in a single corrigendum, to be issued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ssion.

The meeting was called to order at 3.15 p.m.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agenda item 4) (continued)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68/Add.1) (continued)

1. The CHAIRMAN invit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nswer the questions raised by Committee members.
2. Mr. Soo Gil PARK (Republic of Korea) thanked Committee members for their appreciation of his country's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Nevertheless, the questions members had raised revealed a number of misconceptions, due perhaps to a lack of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or deliberate attempts by certain parties to exaggerate iso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3. The Declaration for Democracy of 29 June 1987 had truly been a turning-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subsequent democratic reforms, embodied in the new Constitution, had made it possible for former dissident leaders to run for the presidency in 1992, for the press to criticize the Government without restrictions and for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to be guaranteed. In the rece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ruling party had almost lost its majority. The Assembly frequently investigated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rought the Government to account where necessary.
4. Some of the comments made by Committee members did not seem to recognize the enormous changes which had taken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Seventeen laws had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d also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Members had talked about "political prisoners": however, the legal experts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consider that people convicted of injuring police officers or throwing firebombs at State property could be considered political prisoners. Members had further describ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the "de facto Constitution" and had inferred that the un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so great as to make extraordinary measures necessary. That was simply not true.
5. Some of the material which Committee members had possibly used in preparing their questions - and one source in particular - was notable for its lack of objectivity, balance and accuracy. For instance, the source in question had stated that the two Koreas had registered the South-North Agreement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March 1992 under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fact, it was stated quite clearly in the Agreement itself that it was not to be considered an international accord. Moreover, the same source had alleged that the works of E.H. Carr and Bruce Cummings, let alone those of Marx and Lenin, were prohibi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e had read those works himself as a student, and they were still widely available. The mere possession or reading of any book was not a 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6.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ere amo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past year had raised hopes of a dialogue between the two sides. In May 1992, three bodies had been established to work on a basic agreement governing unification. However, the two sides' differences on the nuclear issue had hindered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although he hoped that a spirit of mutual compromise would yet achieve results. It was also to be hoped that an agreement would soon be reached on family reunion; at present, separated family members were not even allowed to telephone or write to one another.
7.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peace and democracy. His Government's plan was to establish a provisional Korean commonwealth, which would promote peaceful coexistence, national homogeneity and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commonwealth would be composed of a council of presidents, a council of ministers, a council of representatives and a joint secretariat, as well as a resident liaison office in each capital. After that, the legislative body of the commonwealth -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 would draft and promulgate a constitutional law for a unified Korea by means of democratic procedures. Finally, a general election would be held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law to elect a unified parliament and government. Unfortunately, however, the other side took a different approach to reunification, and it was thus difficult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current dialogue.
8. Mr. Kook Hyun YOO (Republic of Korea) said that many members had ask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venant. Under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the Covenant had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He could not accept the claim that the guarantees contained in the Covenant might be overturned by subsequent domestic legislation, since such a suspicion underestimated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the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thanks to the Government's public awareness campaign. Moreover, since the principal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were also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any conflicting domestic legislation would be deemed unconstitutional. If an individual claimed that his rights under the Covenant had been infringed, the court would normally rule on the basis of domestic legislation; in the rare cases where that was not possible, the Covenant could be invoked directly by the courts.
9. Article 37 (1) of the Constitution stated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ould not be neglected on the pretext that they were not enumerated in the Covenant: it was his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that that article covered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except those in respect of which the Government had entered reservations.
10. In reply to Mr. El Shafei's question about the remedies available to persons whose human rights had allegedly been violated, he said that individuals were free to activate the procedures outlined 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In reply to Mrs. Higgins' question as to what measures the Government would take if the Committee expressed views on a cas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he could only say that the Government would make every effort to reflect the Committee's views in its future legislation. Mr. Herndl had asked about the remedy of petitions: a complaint lodged by a petitioner would be dealt with b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nd, if the petitioner was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he was automatically entitled to lodge a complaint with the court.

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deavouring to establish a dialogue with North Korea while coping with a very real threat of destabilization and military provocation. Until the other side stopped using terrorism as an instrument of its foreign policy, his country was bound to retain the National Security Law. His Government did not agree with the view that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dialogue was a sign of a change of heart.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strictly appli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Covenant: it was only used to counter subversive acts which endangered national security and the democratic order.

12. It had been suggested that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fring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art, creativity and education; such restrictions were far beyond its scope. It had further been alleged that articles 3 and 7 infringed the freedom of association. However, the latter articles prohibited only the activities of anti-State organizations which endangered national security. Article 10, which had also been criticized, was designed not to infringe freedom of conscience, but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about criminal acts which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13. In order to preclude any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Government had incorporated into it the substance of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April 1990, which had defined "activiti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to cover explicit communist activities, infiltr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or an attempt to destroy the constitutional system. "Activities endangering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had been defined as activities which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majority rule exclusive of violence and arbitrariness and a legal order based on liberty and equality, or activities which destroyed the existing order. The term "anti-State organization" had been defined as covering organizations which purported to assume authority over the Stat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or to overthrow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not possible to be convic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simply for harbouring or expressing communist ideas or for having a positive opinion about North Korea, provided that those sentiments did not lead to the commission of illegal acts.

14. Miss Chanet had asked about the definition of espionag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concept was actually defined in the Criminal Code as the collection, divulging and transmission of national secrets (which comprised not only military secrets, but also poli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on the instructions of anti-State organizations or their members. The provision covered only information which might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and it was not invoked unless there had clearly been an attempt to pass information to North Korea with the knowledge that the

information would endanger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had been convic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f they had attempted or advocated the overthrow of the Government by violent revolutionary means. In all cases, defendants had enjoyed the full constitutional safeguards which ensured a fair trial.

15.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not retroactive: the old law still applied to acts which had taken place before the amendment. The country's legal experts considered that amendments should not be retroactive unless they were designed to redress wrongs or eliminate contradictions in the existing law.

16. Members of the Committee had asked about the role of the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s were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com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were guaranteed independence by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Act. Prosecutors had to possess the same qualifications as judges, pass a highly competitive examination and complete a two-year training course. In order to preserve their political neutrality, they could not be suspended except by impeachment or conviction for certain crimes, and their salary levels were guaranteed. They we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ases, supervising the police and submitting requests to the cour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Prosecutors working on public security cases did not possess any special qualifications. A body called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gathered domestic security information about communist and subversive activities and conducted investigations in a limited number of cases, includ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17. There were three levels of court - district courts, high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militar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impeachment cases,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conflicts of jurisdiction. Judges served for 10 years, and could be reappointed for further terms. They could not be dismissed except by impeachment or conviction for certain offences, and their political activities were restricted.

18. Mr. Herndl and other members had remarked on the small number of grounds for possible discrimination laid down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He wished to make it clear that the list was a purely indicative one, and other grounds, such as differences in political opinion, were not excluded.

19. Mr. Aguilar Urbina had inquired about a foreigner'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Foreigners were not guarantee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but the Government did employ foreigners on a contract basis. Only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entitled to vote or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20. Miss Chanet had asked what constituted "reasonable cultural discrimination": that term was intended to cover differentiation based upon a person's educational accomplishments.

21. A question had also been asked about the de facto status of women. Despite the advances in women's status, most female workers were still in low-paid jobs, and there were few women in senior academic posts. There were

not enough State child-care facilities for low-income families, and the tradi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ill lingered on. The Government had endeavoured to eliminate the traditional stereotypes,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and increase welfare facilities.

22. Under the 1945 Nationality Act, women were obliged to take their husband's nationality on marriage and to be naturalized if the husband was naturalized. The Republic of Korea had lodged a corresponding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owever,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n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to bring it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3.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der a state of emergency,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at, even if it were necessary to restrict certain rights, it was not permissible to restrict the "essential aspects" of a freedom or right. That term safeguarded all the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4 (2) of the Covenant. Under article 76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could issue an emergency order in times of insurgency, external threat, natural calamity or serious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If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found that the emergency order was not justified, it would be revoked forthwith.

24. Mr. Prado Vallejo had asked about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s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with reference to the imposition of restrictions in certa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laid down in the Constitution, the Criminal Code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National security" meant the countering of foreign aggression and the safeguarding of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Maintenance of order" meant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and social order necessary for a normal life. "Public welfare" referred to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the public. The term was used in a positive sense which went beyond the maintenance of order, being used in laws concerning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environment, land use, town planning and the protection of green spaces.

25. Mr. Dimitrijevic had asked about the law on abortion. Although abortion was penalized under the Criminal Code,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permitted exceptions in cases of rape, incest and threats to the health of the mother.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to take those exceptions into account. The reference in the report to abortions for eugenic reasons (CCPR/C/68/Add.1, para. 110) covered cases where the foetus was severely deformed.

26. Turning to the subject of the death penalty, he said that, besides the offences cover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15 crimes were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under the Criminal Code. As Miss Chanet had noted,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in cases of robbery, but that would not happen unless there were vile aggravating circumstances. The death penalty was a rare exception, not the rul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had already considerably reduced the number of capital offences and intended to progress further in that direction.

27. Members of the Committee had referred to a claim that 50 offenc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dealt with only one crime - anti-State activities which endangered national security - and many offences referred to in the law, such as murder for the purposes of insurrection, were also covered by the Criminal Code. Under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the death penalty was carried out by hanging.

28. Several members had raised the question of protection against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The courts would not accept a confession unless it could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it had been made voluntari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unnatural death of Jong Chul Park in January 1987, five police officers had been convicted and sentenced to prison terms of between 3 and 10 years. In response to Mr. Wennergren's question abou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had been convicted of torturing prisoners, he could say that six officers had been sentenced to prison for 2-10 years, 14 had received suspended sentences and 9 more cases were awaiting trial. Places of detention were inspected regularly: prosecutors inspected the detention premises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t least once a month,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nspected all prisons at least 10 times a year. Any complaints of inhuman treatment were investigated immediately by the prosecutor's office.

29. Miss Chanet had referred to the case of Ki Rae Park. His conviction had been based on objective evidence, and not on a confession extracted under torture, as had been alleged. Ki Rae Park's prison sentence had been reduced for good behaviour, and he had been released on probation on 25 May 1991.

30. Mrs. Higgins had inquired about the situation of long-term prisoners. Such prisoners had been convicted of attempts to 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 or to disrupt the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Government could not afford to release prisoners unless it was sure that their release would not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It therefore considered every application for early release on its merits.

31. Several questions had been raised about the period of deten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54 of the report. The term referred to the time that elapsed between the date of arrest and the date of the final court judgement. Such detention could not exceed six months and the court must render its judgement during that period or release the suspect.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n how the court reviewed the legality of a detention, he said that a suspect detained pursuant to a warrant, or his lawyer, legal representative, spouse or other family member, cohabitant or employer,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an examination of legality to an appropriate court. The court must then examine the case promptly and either dismiss the application or order the release of the detainee. The prosecutor, the defence counsel and the applicant could appear before the court and present their views. Arrest or detention must be followed immediately by notification of the detainee's family.

32. Several questions had been raised in connection with article 10 of the Covenant, concerning treatment of prisoners, and also in that context inquiries had been made about the correctional education of inmates, which

also had implications for articles 18 and 19. As well as punishment,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al system was the prevention of further crimes and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o accomplish the latter, inmates received correctional education aimed at cultivating sound civic values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crimes. Such prison education programmes were a common feature of almost all modern prison systems. Inmates incarcera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lso participated in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exchanges of views about competing ideologies, the goal being that a prisoner's re-entry into society should not pose a problem for the country. Comparative discussion of ideologies in the hope that a prisoner would absorb democratic ideals did not constitute "forced conversion". Inmates whose beliefs, if translated into action, might pose a threat to the Republic were not eligible for parole. Apart from that exception, all inmates received equal treatment and had equal rights, including family visits. No special restrictions were imposed on those who had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Meetings with relatives and friends lasted for 30 minutes and the period could be extended on request if approved by the prison authorities.

33. Unconvicted detainees were entitled to meet relatives once a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in January 1992, that article 62 of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prohibited an unconvicted detainee from meeting his attorne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 prison officer. The Government planned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reflect that decision. The term "sound national spirit", which had given rise to questions, was an attempt to render the original Kore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restoration of a prisoner's moral sense. The term "voice prevention tool" also used in the report meant a gag, as commonly used in many countries.

34. In connection with article 12, on freedom of movement, Mr. Ando had asked a question about visits to North Korea by South Koreans. Since the hope of peaceful reunification had yet to be fulfilled, some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ravel to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 which provided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he Government hoped that it would soon be possible for the restrictions to be lifted. The Special Act Governing Intra-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lready authorized visits to North Korea for certain specified purposes with government approval.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residence, a statute called the Residence Registration Act applied.

35. A question had been asked in connection with article 13 about the treatment of Vietnamese boat people. The Government was working with UNHCR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boat people until they could be resettled in their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or a third country willing to accept them. So far, about 1,220 boat people had been resettled in third countries after arr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ne hundred and forty-five boat people were still residing in a temporary accommodation camp.

36. In response to several questions about article 14 of the Covenant, he said that the Republic's Code of Criminal Procedure was based in part on the Anglo-American adversary system. It provided for the right to assistance by defence counsel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suspect could designate his own counsel and communicate with him, and counsel could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search warrants, evidentiary procedures and reviews of the legality of arrests. There were no exceptions to a suspect's right to communicate with counsel. He noted that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153 of the report, on speedy trial, should be deleted.

37. In response to inquiries about the military courts, he said that the Military Court Act specified the procedures to be applied by military justice and guarantee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fendant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courts'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only exception was the right to appeal. For certain specified crimes, in particular espionage, the military court was the court of final instance. However, if a defendant was sentenced to death, a mandatory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guaranteed regardless of the charge. Civilians were rarely subject to military justice, but it could apply to civilians who committed such crimes as military espionage, supply of contaminated food to soldiers, and unlawful activities in respect of prisoners of war and sentries under martial law. In that connection, the phrase "extraordinary law" in paragraph 211 of the report should read "extraordinary martial law", as declared in states of siege or on the outbreak of war.

38. A question had been asked in connection with article 19 about the protection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He emphasiz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practise censorship. There was no list of prohibited books. The writings of Marx and Lenin, together with other communist works, were freely available in bookstores and university libraries. Nor was there any censorship of academic conduct. The confusion on the issue could be traced to a pro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mposing restrictions on propaganda that could destabilize the Republic. The publication, copying, transportation or dissemination of propaganda for the purpose of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was forbidden.

39. As far as preventive censorship in other media was concerned, three laws - the Performance Act, the Movies Act and the Act Concerning Records and Video Materials - imposed very limited restrictions on movies, records and tap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morality. They were fully in accordance with bo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and article 19 of the Covenant. Film producers were required to register and films were classified, as in many other countries, to protect children from indiscriminate sex and violence. Under the Performance Act, scripts and scenarios written by nationals of countries with which the Republic had no diplomatic relations were reviewed by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which was composed of civilian specialists.

40. A question had been raised by Mrs. Higgins about the requirement for advance notice of public assembly. On receiving notice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examined it to see whether the gathering would occur at a prohibited time and place and whether it would disrupt traffic. As long as it conformed to the regulatio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could proceed as scheduled. If it had the potential to create violence or posed a clear threat to public order and safety, a prohibition order was issued, nullification of which could be sought in the courts. In determining the potential for violence,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were reviewed, including the purpose of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organizers' past record, their capacity to control the demonstrators and the plans for the

demonstration, for example, whether attacks on public agencies appeared to be contemplated. On 1 June 1991, the Government had established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sideration Committee and had issued objective standards for limiting prohibitions on assemblies with a view to the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41. In reply to the question by Mr. Mavrommatis concerning the provision prohibiting certain teachers and journalists from joining certain political parties, he said that the Government was of the view that strict impartiality in party politics was required of teachers and journalists. The Government also considered that the Political Parties Act was compatible with article 25 of the Covenant. However, when a specific case involving that article was brought before a court, the court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vernment's opinion.

42. A question had been asked about the grounds for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stated that, if the purpose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we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could bring an action for its dissolu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litical party would then be dissolved or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decision. Under that provision, a communist party which intended to create a communist regime through a revolution of the proletariat was banned.

43. A question had been asked under article 24 of the Covenant about safeguards against child labour. The Government was making every effort to prevent the employment of children in bars or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Those efforts included educational seminars for management and the inspection of premises.

44. In reply to Mr. Herndl's question about minorities, in connection with article 27, he said that Korea was a homogeneous nation with a distinct population sharing a common language and culture and more than 4,000 years of history. There were, however, approximately 51,000 resident foreign nationals, of whom 23,500 were Chinese. In 1991, about 80 people had become naturalized citizens, most of them being of Chinese origin. All of them enjoyed fundamental human rights in every fiel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o the Covenant.

45. In conclusion, he thanke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their thoughtful and thorough questions and comments on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46. The CHAIRMAN invite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o comment on the replies to their questions.

47. Mr. WENNERGREN thank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very helpful replies, which he believed had given the Committe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regarding human rights in Korea. Nevertheless, although on the face of it the country's Constitution seemed to contain all that was required for a democratic state under the rule of law, the situation was not entirely clear. For example, he had some difficulty understanding why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was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re was a conceptual tradition in that field, and to claim that freedom of opinion was covered by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did not altogether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ovenant. The argument that the so-called umbrella clause,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whereby various rights and freedoms were not to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not enumerated, covered the point was not adequate. To ensure real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opinion a solid structure of explicit rules was needed.

48. Article 37 went on to say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ould be restricted by law when necessary, but that even when such restriction wa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particular freedom or right should be violated. He hoped that when the second periodic report was presented that term would be fully explained. The freedoms and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37 were all enshrined in the Covenant and it should not be necessary to say in the Constitution that they should not be neglected.

49. He noted from the reply regarding judicial supervision of detention that complaints could be made to the court, which was then obliged to review the matter. According to article 9 (3) of the Covenant, however, anyone arrested must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and the detainee or his relatives should not need to make a special request. The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to bring the rules regarding detention into compliance with article 9 (3). He also noted that there was no mention of the security po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though it was important for deten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lso to be subject to judicial supervision. That point too should be addressed in the second periodic report. He recognized that the area was a difficult one for most countries, all of which possessed a secret police but were loath to discuss the matter. Nevertheless, citizens were entitled to protection in that respect also and it was not clear from the report and the replies what the real situation was in the Republic of Korea.

50. The Committee had learned a great deal from the report and the highly informative replies to its questions and he looked forward to learning still more from the second periodic report. He hoped that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also learned what was needed to bring all its procedures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51. Mrs. HIGGINS thanked the delegation for its painstaking and detailed replies to the Committee's questions. She believed she was typical of the Committee members as a whole in sensing a forward mo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significant shift of approach. She assured the delegation that the Committee's comments were intended only to help advance that process. She also assured the delegation that whil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received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thus did their own research and made their own assessments. She was gratifi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become a party to the Covenant and that it had accepted the Optional Protocol, as well as joining ILO. She was also pleased to learn that consideration was being given to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the Covenant. She had been impressed to hear about the progress that had been made in regard to legal aid and towards narrowing the scope of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e had learned that internal dissent was now possible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playing a vigorous and independent role. At the same time, it was evident that more needed to be

done. The next task should be to check existing and pending laws systematically not just for constitutionality but for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As had been pointed out, the Constitution itself did not altogether cover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52. Notwithstanding the narrowing scop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e was still concerned that a continuing need was felt for such a law. It had been explained in the reply that the underlying objective was to eliminate and control the activities of anti-St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building up of a non-democratic, specifically a communist, State. Ultimately, that could only be done by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The ordinary law should be able to cope with activities of the kind referred to. She noted that, for instance, the crime of homicide was already covered by the Criminal Code and could be dealt with through the ordinary law. She felt similar concern about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The broad definition of State secrets in connection with the definition of espionage was potentially open to abuse.

53. She hoped that the list of offences liable to the death penalty,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article 6 of the Covenant, could be further reduced.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was also a matter of continuing anxiety. She felt that education and discussion of the kind described and the conditions for governing release did not constitute rehabilitation in the normal sense but rather coercion and an infring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in regard to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case of the advance permission needed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she suggested that a permit should only be required if the assembly was actually to take place in an unacceptable location. Otherwise, there should be freedom of assembly. In the context of the control of torture and the allegations made in that connec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and the outcome of prosecutions was of great interest. The real problem in regard to detention was the period allowed for interrogation before charges were laid. She was aware of the find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her understanding was that, as a general rule, detention could last for a full 20 day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plus 30 day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hat represented a very long time before access to the judiciary,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did not seem to be subject to identifiable democratic controls or access to the usual organs of recourse. Article 9 (3) of the Covenant spoke of the duty to bring a detainee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period she regarded as reasonable was very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e period which seemed to operat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54. In conclusion, she thank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ain for its very well-prepared initial report and congratulated the delegation on its excellent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55. Mr. MYULLERSON thanked the delegation for its admirable endeavours to answer the many questions put by Committee members. He had, however, been surprised by the sharpness of the responses to some of the questions asked. He did not think that it was at all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that there

were no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Many concerns had of course been expressed, but members of the Committee had also spoken of the progress that had been made, especially recently.

56. One of his own concerns was that visits to North Korea could only be undertaken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restrictions were not reasonable and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venant. Surely such visits would merely contribute to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truly democratic country might fear the threat from a totalitarian State but should not need to fear the ideas held in such States.

57. His main anxiety was about some of the laws in force in the Republic, especially the National Security Law. Such a law ought to be superfluous since, as Mrs. Higgins had pointed out, ordinary and more specific criminal laws should suffice to deal with offences against national security. The Law was very loosely phrased, using such broad concepts as "sound national spirit", which were open to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58. Again, the delegation had said that propaganda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was prohibited. Acts could certainly jeopardize security, but it was not clear to him how propaganda could do so. There was a danger that such concepts could be used against those who merely held different views.

59. The number of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was still rather high, and he hoped that it would continue to be reduced.

60. With regard to the Committee's attitude to NGO reports, the members were used to drawing on material from a variety of sources in assessing State party reports. They did not, however, take it all at face value and only accepted it when there was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sources, often in fact asking Government delegations for their comments.

61. In conclusion, he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accession to the Covenant and its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t had submitted a good report and had engaged in helpful discussion. He hoped that the outcome would be still further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No country offered a safe haven for human rights, and there wa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62. Mr. HERNDL thanked the delegation for its comprehensive report and its replies to the many questions put by members of the Committee, who all welcomed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to the Covenant, its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its accession to membership of ILO. There had clearly bee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with the introduction of its new Constitution.

63. While the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the Republic found itself must undoubtedly have implications for public order, the importance of such a situation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manage it by use of the ordinary criminal law, as Mrs. Higgins had urged. Like previous speakers, he had some lingering doubts: was the National Security Law really necessary? And should not an effort be made to reduce the number of crimes for which capital punishment could be imposed? The fact that

there had been 82 executions over a period of 10 years wa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spirit of the Covenant. In all countries there was a permanent need to keep police activities under surveillance, and the delegation must be conscious of that need in the Republic of Korea too. The long periods of detention practis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must also be a cause for concern.

64. In conclusion, he emphasized that comments by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always intended to assist Governments in adopting policies to enhance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65. Miss CHANET thanked the delegation for its well-constructed report and expressed appreciation of its endeavours to respond to the many questions asked by members of the Committee.

66. It was a matter for concern that, according to NGO reports, a considerabl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 whom she would rather call "prisoners of opinion" - were still being held in the Republic. As to the plots to overthrow the Government to which the delegation had referred, the overthrowing of Governments was a legitimate objective of opposition parties and an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tic process; it was only reprehensible when violence was used to that end. For her, holding "prisoners of opinion" in detention seemed dangerously like imprisoning the political opposition. Such appalling acts as the destruction of Korean Air flight 858 by terrorists, which had been mentioned in def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utterly deplorable, but many other States had also been victims of terrorism, and such acts did not warrant sweeping limitations of the rights of citizens. The Covenant provided for some flexibility in emergency situations but it should not be so broadly interpreted as to justify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67. Nor was she fully satisfied with the information given to members of the Committee on articles 4 and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were so vaguely drafted, for example with regard to espionage, as to leave the Government wide discretion in such matters as assessing the damage caused to the State by the divulging of secrets. Citizens appeared to be left in doubt as to whether or not, in engaging in particular actions, they were violating the Law. Such legislation posed problems in relation to articles 15, 18 and 19 of the Covenant.

68. In spite of the explanations given, she continued to be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death penalty could still be incurred, whether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or the Criminal Code. For instance, the inclusion of robbery among capital offences certainly seemed to contravene article 6 of the Covenant, which restricted the death sentence to "the most serious crimes". Even if judges in practice refrained from imposing that sentence, it did not appear justified to retain it on the statute-book in so many cases. She associated herself with Mr. Wennergren's remark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and with the disquiet expressed by Mrs. Higgins and Mr. Herndl about the duration of pre-trial detention.

69. In conclusion, she expressed gratification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had improved and that the Government was advancing towards a truly democratic system guarantee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70. Mr. ANDO expressed gratitude to the delegation for its painstaking efforts to answer the questions asked by members of the Committee. As previous speakers had said,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porting procedure was to permit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States and to explore ways in which any human rights problems that existed could be solved. The Committee could be thought of as holding out a helping hand to fellow human beings in difficulty.

71. Despite the clarifications given, he continued to share a number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previous speakers. One was the persisting inequality of the sexes. He understood the difficulties posed by Confucian and other historical traditions, but the objective of social policy must be to achieve conformity with the goals of the Covenant. He also felt disquiet over the excessively long periods of pre-trial detention; that was clearly a matter that called for review. As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he could see no justification for attempting to change their beliefs or convictions by pressure, even in the context of endeavouring to inculcate democratic ideas. Any kind of coercion, whether physical or philosophical, was inadmissible. Moreover, under the right of association, teachers and journalists should be free to join the political party of their choice. Since the Republic of Korea had recently become a member of ILO, it was to be hoped that the many conventions of that organization would provide guidelines for future policy. Despite the explanations given, he was still not convinc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did not impair human rights. Its very vague wording and wide scop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nti-State activities, constituted a particular danger.

72. While he recognized the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and its policies, which were perhaps not always fully appreciated by those who had not visited the Republic, it was important to realize that changes were occurring, and that what was essential above all else was to persuade others that democracy was preferable to any other political system and to demonstrate it by a conduct of affairs in sharp contrast with that of dictatorships. Like Japan, the Republic of Korea had made great economic progress in a short space of time. Such progress, however, generated its own problems and often brought capital and unions into confrontation. It was essential for both sides to learn from one another so that they could achieve a genuinely free market system working to maximum efficiency. Again like Japan, Korea was a homogeneous society, and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such societies, it was particularly difficult for them to learn how other people thought and behaved. The pursuit of human rights was one of the ways of developing tolerance and understanding of those with different ideas and backgrounds. There was no doubt that the Republic had set out on the right road and made a clear break with certain attitudes of the past. He was confident that, when it presented its next report to the Committee, further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would be apparent.

73. Mr. AGUILAR URBINA said the fac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acceded to the Covenant,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and joined ILO, and that it had sent a high-level delegation to present its report to the Committee all testified to its willingness to advance towards better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While he was grateful to the delegation for its efforts to respond to questions put by Committee members, he felt some uneasiness about some of the answers and explanations given, which were not quite those expected. He wa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seemed to him to reflect practices that pervaded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The definitions used were often so broad as to be hardly definitions at all. The legislation did not concretely define a great number of concepts affecting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 for example, what comprised anti-Stat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 and it would be possible to make a virtually endless list of uses in the report itself and in a whole series of laws. Mr. Park had spoken of aspects of the past that had been eliminated, but Mr. Yoo had conceded that vestiges of tradi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ill remained. Great changes had been and were being made, and the present was a transitional period, and a period of hope. But in such periods it was necessary to win hearts and minds, as Mrs. Higgins had put it. That was the main task facing any democratic system. It was not by such laws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 its broad definitions that such a victory could be won.

74. He was concerned over what had been said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nswer to the claim that there were 50 crimes for which that penalty could be impos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t had been stated that in fact there was only one crime - anti-State activities that endangered State security. That answer gave grounds for even graver concern since it appeared, in view of such a breadth of definition, that, instead of 50 crimes more or less specifically defined, there were an infinite number of acts that might be considered crimes that could attract the death penalty. He had similar concerns relating to the inclusion of theft among the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Mr. Yoo had said that it would only be so punished if it had been committed with vile aggravating circumstances, but what such circumstances might be had not been indicated. It was that uncertainty about what was in practice against the law that he regarded as a vestige of the past. He accepted the assurance that such vestiges were disappearing, and he hoped that that process would be completed in the near future. There were still considerable discrepancies between the Covenant and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in its present form, and there was a clear need for revision. The Covenant was in general an expression of the democratic system to which the Republic was aspiring.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among others there was a series of limitations relating to anti-State organizations and many references to communism and communists. A joke he had heard recently asked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United States and Russian democracy, the answer being that in the former the Communist Party was allowed to exist.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as in fact one that acted as a bulwark to freedom. The United States had, in acceding to the Covenant, made a reservation to article 19, and, unlike most such reservations, it was one that could only arouse respect, namely that, in the United States view, the article placed unwarranted limitations up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on the other hand, was in his opinion unacceptable and in flagrant contradiction with the Covenant. Another such matter was the re-education to which prisoners were submitted in order to ensure their fitness to re-enter democratic society after their release. Such attempts to change people's ideas and opinions by pressure were clea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were incompatible with article 14 of the Covenant. A much more effective means for the Republic to achieve the objectives it had set itself would be to have no such laws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o welcome the fact that prisoners re-entering society enjoyed full freedom of criticism, for improvements could only be achieved when people were free to criticize the existing order.

75. Mr. PRADO VALLEJO said he found the dialogue to have been generally positive, and commended the cooperative attitude display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progress had undoubtedly been made in the guarantee and exercise of human rights. It seemed clear, none the less, that there were ingrained habits of thought and deeply-rooted customs to be overcome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more particularly article 2, paragraph 2, were fully complied with.

76. He noted with special concern the excessively broad interpretation given in the Republic to the notion of public emergency.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rights by law when that was deemed necessary for "public welfare" was most disquieting: that was certainly at variance with articles 4 and 9 of the Covenant.

77. As remarked, the National Security Law seemed to leave the way open for abuses both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e referred especially to the provisions concerning detention, which could be imposed for activities vaguely qualified as dangerous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survival of the State, of the repressive and authoritarian manner in which political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considered and treated, even after serving sentences, and of the unduly lengthy periods during which persons could be held without trial, as well as the delays which virtually paralysed the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concerning abuses, including torture, committed by police and other officials. The number of offenc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ould apparently be imposed was also alarming.

78. That being said, he acknowledged the endeavours of the Government in a situation that still bore the scars of past events. There were welcome signs of social renewal that could encourage the fuller flourishing of human rights. It was especially to be hoped that, against the worldwide background of crumbling dictatorships, especially in the East, further progress would soon be made in dismantling the barriers that separated the two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 striving towards the unity that was the earnest desire of all people of goodwill.

79. Thanking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detailed replies to questions, Mr. DIMITRIJEVIC assured its members that in dealing with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had always endeavoured to display an understanding and helpful attitude. He wished to dispel any suggestion that some of the remarks made had been deliberately negative, adding that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no more immune than others to journalistic distortion.

80. It appeared to him that in the structures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remained persistent apprehension concerning a perceived imminent threat of totalitarianism from outside the country, and that such apprehension continued to fuel a logic which was at variance with ideas fundamental to the Covenant. For example, he had been struck by the phrasing of the third sentence of paragraph 103 of the report, where rights that should

be guaranteed under all circumstances were presented as exceptional, at least where crime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were concerned. He earnestly hoped that the apprehension and the consequent logic to which he had alluded would soon be relegated to the past: the ideology once so greatly feared as terribly contagious had lost its virulence, and there now seemed to be very little risk to the Republic of Korea of contamination by ideas.

81. Much concern had been voiced over the issu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Covenant. Even non-lawyers, considered the law as an essential means of achieving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nd of guiding behaviour in society. He had the impression tha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Security Law failed to provide such orientation; as well as lending itself to various types of abuse in the form of revenge, denunciation, defamation and so on, it perpetuated uncertainty as to what was permissible, anxiety about such matters as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d misgivings about what constituted an offence. As a consequence, many people in the Republic, particularly the young, could be at a loss to know what kind of behaviour was actually encouraged, supported or tolerated by the State, and what was considered anti-social or dangerous. Added to that were the disquieting phenomena of indeterminate surveillance of persons who had already been sentenced and punished, the exercise of pressure to recant beliefs, and unwholesome inquiry into what was happening in people's minds.

82.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fared better,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than certain other divided countries, and its achievements commanded respect, but surely it could now abandon some of the defensive imperatives of the past and rely more strongly on a more firmly-rooted democracy informed by the law. No nation in the world was completely free of extremist political fringes, whether of the right or of the left, but in democratic societies they were generally rendered impotent by tolerance.

83. In conclusion, he praised the quality and structure of the report present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certainly not unique among thos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in being somewhat short on facts. He thanked the delegation and trusted that it would have found the dialogue useful.

84. Mr. SADI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as a result of the political decision to introduce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an embryonic human rights culture now exi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ing tension with its northern neighbour was no doubt hampering implementation,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political decision had, perhaps understandably, not yet fully reached down to other parts of the system, notably the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where a campaign of education was undoubtedly called for. The Committee would certainly wish to see improvements occurring at a faster pace, and hoped that due account would be taken of its views.

85. Mr. NDIAYE sai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incontestably made considerable progress - most notably in the economic field, although its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ere far from negligible. It was unfortunate that, as a consequence of difficulties with its neighbours,

actions were not always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It also appeared that the ancient question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remained relevant in many instances, and should indeed be posed. There was certainly much room for a further extension of nascent liberties. It seemed likely tha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ould eliminate many problems, but in the meantime he would urge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to make every effort to return to a system of laws mo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86. He had noted with interest references in the report to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stoms; however, he would respectfully suggest that tradition could be synonymous with immobility, and that the more forward-looking approach which was called for might be better served through greater regard to the advantages of written law.

87. The CHAIRMAN commend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quality of its report, its open approach to the dialogue, and the clear and comprehensive replies provided to numerous questions.

88. The main conclusion to be drawn from the discussion was that, thanks to the Government's commitment, an enormous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had occurr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especially but not exclusively as a consequence of the watchful activ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had changed radically, even if the Constitution for the moment failed to guarantee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89. Various concerns had been voiced by Committee members, in connection, inter alia,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capital punishment,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and other important issues. He felt sure that those concerns had been duly noted by the delegation; in that connection, he pointed out that only the written comments which would be adopted -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new procedure - at the end of the session would constitute its considered views as reflected in the official documents. He was confident that those views would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formulation of new legislation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laws. Further important improvements were to be expected in the years to come, and he wished the Republic of Korea every success in that endeavour.

90. Mr. Soo Gil PARK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meeting with the Committee had been a most valuable occasion for an exchange of views on human rights issues, to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paying growing attention and which seemed to be increasingly considered as outside the exclusive jurisdi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7,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ose were welcome developments.

91. In the light of certain remarks by members of the Committee, he wished first to quote the adage that while realism without idealism was immorality, idealism without realism was impotence; and then to suggest that specific contexts and circumstances sometimes ha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He did so particularly because some concern had been voiced in connection with the inculcation during prisoners' education of what was referred to in the Republic as a "sound national spirit". I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re was absolutely no connection between that notion and the nefarious

ideologies of Nazism and Hitlerism; the concern was simply to ensure that when convicted persons re-entered society they would be imbued with th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unique to their country and thus capable of adapting to and leading a normal life.

92. In a concluding statement, he expressed pride in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had taken the significant step of submitting its human rights record to the Committee for collective evaluation through open and constructive dialogue. The outcome of the deliberations had increased the Government's awareness of its responsibilities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democratic community, at the same time enhancing the awareness of all citizens of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under both the Covenant and their country's Constitution. The Committee had helped to place the issue of human rights even higher on the domestic agenda.

93. While he welcomed the constructive observations made, there were some points on which he sharply disagreed. Nevertheless, his delegation was happy with the positive assessment of progress since 1988. The positive comments would be an encouragement to renewed efforts in favour of human rights; criticism would act as an accelerator where further improvement was called for. His delegation's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testified to the Government's commitment and demonstrated its resolve to proceed steadily along the difficult but rewarding path towards the universally desired goals of human rights. No country could claim a blameless record in human rights, and his country was no exception: what was important was the resolute determination to fulfil its commitment under the Covenant.

94. He assured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their comments would be duly conveyed to his Government and that questions which had not been addressed in sufficient detail because of lack of time would be covered in the second periodic report.

95. The CHAIRMAN thank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aid that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was thus conclud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would be due on 9 April 1996.

The meeting rose at 6.20 p.m.

UNITED
NATIONS

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SR.1151
24 July 1992

ENGLISH
Original: FRENCH

HUMAN RIGHTS COMMITTEE

Forty-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1151st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Tuesday, 14 July 1992, at 10 a.m.

Chairman: Mr. DIMITRIJEVIC

CONTEN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tinued)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Third periodic report of Belarus

This record is subject to correction.

Corrections should be submitted in one of the working languages. They should be set forth in a memorandum and also incorporated in a copy of the record. They should be sent within one week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to the Official Records Editing Section, room E.4108, Palais des Nations, Geneva.

Any corrections to the records of the public meetings of the Committee at this session will be consolidated in a single corrigendum, to be issued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ssion.

The meeting was called to order at 10.10 a.m.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agenda item 4) (continued)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68/Add.1) (continued)

1. The CHAIRMAN invite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o continue their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quested the last speakers to put their questions to the Korean delegation.

2. Mr. HERNDL welcomed the presence in the Committee of a high-level Korean delegation and thank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quality of its report, which had been submitted within the time limit and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He warmly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accession to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hus making it possible for persons within its jurisdiction, and not only citizens of the Republic, to apply to the Committee directly.

3. Referring to the Covenant's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noted that, under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the Covenant had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and that meant that it ranked as an ordinary law. In that connection, he was not sure whether it might not be better for it to rank as a constitutional law so that its precedenc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would be guaranteed. Laws enacted subsequently might, for example, be contrary to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if the Covenant had the same rank as ordinary laws, the lex posterior rule would apply, so that some provisions of the Covenant would have no effect. He would also like to know whether the Covenant was regarded as a directly applicable instrument because, if it was, it could be directly invo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namel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courts.

4. With regard to remedies available to individuals, he asked what effect petitions filed by individuals would have, since the law provided only that the State had an obligation to consider such petitions, but did not say what specific action had to be taken on them. He also wished to know whether the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4 of the report could be filed simultaneously, for example, whether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handed down as a result of a petition could be lodged while the litigation procedure was under way in the same case. He would like some explanations about the role of the prosecutor,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e report, and about guarantees of his independence, as well as about the specific or general responsibilities entrusted to the human rights consultation centres established by the prosecutor.

5. As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might require some amendments, for discrimination appeared to be prohibited only on certain grounds, whereas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Covenant were much broader in scope. In

respect of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had always clearly stated that the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odious and serious crimes. There was no doub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carefully thought out the reasons for deciding to maintain that penalty, but he would like some clarifications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as actually applied, for, under national laws, widely varying penalties, which could range from five years' imprisonment to death, could be applied for practically the same offenc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tating that any person who had made false accusations was liable to the penalty provided for in the corresponding article, also called for some explanations: what was the corresponding article?

6.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9 of the Covenant, he would like to have some clarifications about the logic of the reasoning reproduced in paragraph 153 of the report because, in his view, the right of the accused to a speedy trial,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fact that a confession made under duress as a result of unduly prolonged detention was not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were two entirely separate ideas. As to the right of convicts to communicate, as dealt with, for example, in paragraph 168 of the report, which stated that an inmate was permitted to see other persons "when deemed necessary" and "except in limited cases where the meeting is deemed harmful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inmate", he requested information on the Chang Ui-gyun case, which had been recently brought to the Committee's attention. Mr. Chang had apparently been prohibited from receiving visits in Taejeon prison because he was regarded as an "ideological criminal". He asked what the Korean authorities meant by "ideological criminal" and how such status could influence the measures taken for the prisoner's rehabilitation in society.

7. Referr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5 of the Covenant and, in particular,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he requested some explanations on why reference was made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ince it was clearly stated that any law which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would lose its effect "from the decision date". He also noted that very few details were give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7 of the Covenant and that it was indicated only in paragraph 312 of the report that no minorities exi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at was really true.

8. Mrs. HIGGINS welcomed the Korean delegation and thank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aving submitted a carefully ordered and detailed report that had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9. She asked how the Korean authorities planned to ensure that the population was informed of the implications of the commitments the Government had undertaken as a result of its accession to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how the population would be informed of the dialogue that had started with the Committee - particularly the final observations which would be formulated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the periodic reports of the State party - and how the Government would give effect to the decisions taken under